충청권 공동발전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육 동 일 (대전발전연구원장)

- 목 차 -

Ⅰ.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
1. 시대적 배경
2. 필요성
3. 충청권 경제통합의 필요성

Ⅱ. 공동발전과 협력의 형태 및 제도

Ⅲ. 협력사례 및 문제점
1. 협력사례
2. 문제점

Ⅳ.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전략과 과제
1. 공동협력 사업의 발굴기준
2.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내용
3. 공동발전과 협력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Ⅰ.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

1. 시대적배경

○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은 자율적인 지자체들간의 개별적 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한 긴밀한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단위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환 및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호신뢰와 의존관계를 통하여 각 구성부분들이 그들의 업무와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권한 및 역할을 교환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지자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글로벌 경제체제의 확산에 따라 과거 국가 대 국가의 경쟁 구도가 지역간 경쟁으로 이전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지향하는 빠르고 유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쟁의 단위가 지역으로 이양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역간 공동발전을 통한 통합국토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으로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우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신국토 구상에서도 지역간 공동번영을 위해 지역간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프라,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이처럼 지자체간 협력이 강조되는 시대적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화 추세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 경제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 그리고 도시 및 지역의 세계화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세계경제는 자본, 금융,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를 무대로 작동한다. 이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대응하는 장소가 바로 세계도시지역인 것이다.

○ 충청권이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는 대신 인위적인 행정구역 속에 3개 시도가 계속 안주해 버린다면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충청권은 대단위 권역속에서 경제의 활력과 주민들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도시계획, 교통,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치안, 지역개발, 방재관리, 광역쓰레기 처리 및 광역상하수도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다음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도시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상에 구축된 가상도시이다. '사이버 헬싱키'는 오프라인상의 주택, 거리, 공원, 백화점, 관공서, 미술관 같은 도시 전체를 사이버상에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 전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우리도 '리얼 사이버 대도시권'을 인터넷상에 구축한다면 충청권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 이처럼 세계화, 고속정보화, 지방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반면, 점차 지역간 협력행정이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공동투자, 공동협약, 개발신탁 등 지역협력의 방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2.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간의 수평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여 여러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비용의 절감과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수질, 대기, 교통 등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하여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지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간의 협상과 조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보화 및 교통의 발달로 지역이 폐쇄체제가 아닌 개방적 체제로 변하게 됨으로써 지역간 교류 및 유대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의 무대인 시장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에서 넓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에

젖어있고,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담당조직이 미비하여 자치단체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충청권 경제통합의 필요성

○ 충청권 3개 시도광역단체장은 지난 12월 정책협의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수도권에 대한 공조 대응 등 충청권 공동발전 5개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제 수도권 문제 등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각 시도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지역간 이해득실을 떠나서 충청권 공동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충청권발전을 위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때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유럽국가들은 지역(광역)정부(Regionalism) 중심의 지방행정체제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정부 중심의 광역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마스트리츠 조약을 통해서 지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존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정책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 서울, 경기, 인천이 상호협력으로 대중교통과 한강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하나의 대도시권 개념으로 해서 대수도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수도론의 주목표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지금 이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이 갈수록 지방의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켜서 사회적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충청권의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통신 및 교통망 확충 등 충청권이 전국의 행정 및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활용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충청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서 충남서북부권의 천안테크노밸리, 아산탕정 크리스탈 밸리, 오송바이오 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가시화를 활용한 산업의 Spillover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이를 활용한 첨단지식산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충청권 내의 경제발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함으로써 균형적 발전을 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공동발전과 협력의 형태 및 제도

1. 지자체간 공동협약 및 제휴

○ 자치단체간 공동협약(Joint Agreements) 및 제휴(Coalitions)는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상호간에 협력과 조정을 통

해 목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자체 상호간에 공동의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2. 지자체간 공동추진협력

○ 지자체간 공동추진협력(Promational Partnership)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및 관광진흥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의 형태이다.

3. 지자체간 공동기구의 설치

○ 지자체간 공동기구(Agency Partnership)의 설치는 지역간에 공동의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개발기구, 지역개발기구 그리고 지역관광진흥기구 등이 있다.

4. 지자체간 공동투자

○ 지자체간 공동투자(Joint Venture)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커서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요구되고 지리적으로도 지자체의 경계가 상호 중첩되는 광역시설 또는 지역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합

한 방식이다. 대규모의 항만시설, 공항건설, 광역상하수도 시설 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지자체간 개발신탁 방식

○ 지자체간의 개발신탁방식(Development Trust)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공동으로 신탁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6. 지자체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

○ 지자체간의 전략적 제휴 (Strategic Partnership)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적인 협력 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행해지는 방식이다.

Ⅲ. 협력사례 및 문제점

1. 협력사례

1) 충청권 행정협의회

○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1995년 3월 3일에 설치되었다. 행정협의회의 주요업무는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관련된 사무의 협력, 충청권의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처리 및 협력, 지역경제 및 충청권 광역관광 공동추진 등이다.

2)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

3)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4)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5) 3도3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6) 백제권 관광 벨트와 추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7) 전국온천지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2. 문제점

○ 충청권 지자체간 협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면에서 행정구역의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충청권 지역산업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충청권의 지자체간 협력 사례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구체적 목표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류협력의 선언 및 추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충청권의 지자체간 협력사례는 일방적인 관주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의 주요 관건인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와 함께 충청권의 광역시도간 협력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사업 추진의 경우 대부분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는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사업이 선언적 성격을 띤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의 사례

1) 동경, 토론토, 뉴욕, 런던, 케이프타운 대도시권

2)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유럽경제통합

3) 일본 나고야권 경제통합, 오사카 대도시권(오사카, 코베, 교토)을 통한 도시재생 및 자립화 전략

4) 관서광역연휴협의회

1999년 관서의 지방자치단체(2부 7현 3정령시, 미에현, 도쿠시마현 등), 경제단체 등이 관서전체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관서는 하나'라는 이념하에 현재 '문화 및 관광', '정보발신 PR', '방재' 등의 6개 분과를 설치하고 연계책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다.

5) 미국의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등이 지난 65년 지역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 주택, 교통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지역간 협의와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6) 베이징, 텐진, 허메이성의 경제통합

7)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중(양해각서 체결후 공동사업 발굴)

Ⅳ.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전략과 과제

1. 공동협력 사업 발굴기준

1) 3개시·도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2) 3개시·도 공유이익 창출이 큰 분야
3)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4)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
5) 경제이익을 피부로 느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2.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내용

1) 공간재편성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공동구축추진

○ 행정도시, 대전, 청주, 천안의 공간균형으로 국토중심권의 공간정비

○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중심거점(Strongholds)육성

○ T자형 공간구조를 보완하는 남부, 서남해안, 동북부축의 개발정비

○ 충청권 동서간선축의 강화와 호남고속철을 비롯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2) 충청권 광역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특화

○ 대전을 IT-BT 중심의 R&D 거점으로 하여 천안 아산, 청주 청원, 오송 오창을 스포크형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원에서 전략산업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 대전은 기술개발형 산업클러스터 조성, 충남북은 첨단기술-생산연계형 산업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첨단기술벨트조성 시범협력사업 추진 : 3개시도 접경지역에 창업연계벤처기업 생산단지 협력 조성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쟁점과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지정·고시(2006. 1. 2)

- 1광역시, 4시·4군 13,598㎢

○ 전국으로부터 유입인구가 작아지게 되고, 그만큼 대전, 충남북의 주변 인구를 흡입하는 기능을 하여 충청권 주변지역의 공동화 가능성(내재개발계획 : 2030년 유입인구15만명(30%), 자족적 유발인구 35만명(70%)제시)

○ 정책적 유입인구와 자족적 유입인구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여 각각 25만명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행복도시의 설립요건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범위 및 시·군 상호간의 기능 등 역할 정립

4) 청주공항 활성화 공동추진

○ 청주공항 기능특화와 이용활성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 국제노선 대폭 확충

○ 청주공항과의 간선교통망 체계 확립과 공항시설 확충 (대전~행정중심복

합도시~오송~청주공항간 고속화도로/BRT건설 추진)

○ 청주공항과 지역개발 연계강화 (배후지역 공동개발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

5) 충청권발전 특별법의 제정 등 제도적 조치

○ 행정도시, 대덕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는 충청권 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충청권 경제협의회를 즉시 가동

○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 수도권에 대한 공조 대응

○ 개발촉진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지구, 신활력지역사업, 소도읍육성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등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제도 활용으로 충청권의 균형발전 유도

○ 충청권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 문화, 역사, 관광교류 등 상호협력체제 구축

○ 22조 4천억 규모의 서남권 개발, 전남·경남·부산의 남해안발전특별법, 강원·경북·울산의 '동해안광역권개발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충청권의 현안과제인 장항산단과 하이닉스 청주공장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대전 유치 등에 힘을 결집

○ 충남도청사 최적 활용방안 모색

3. 공동발전과 협력을 위한 과제

1)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의 구축방안

○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과정과 결과가 보다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의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 정책개발과 집행의 협력적 형태 혹은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해서 다음의 다섯가지 방안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협력 ② 이해당사자의 참여 ③ 참여자의 원만한 관계 구축 ④ 경제, 환경, 사회적 의제를 통합한 지역적 이미지 만들기 ⑤ '지방적' 지식의 활용 등이다.

○ 대전·충남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공동발전의 목표아래 상호기능을 발휘하는 민·관·산·학·언의 5각 구조인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3개 시도연구원의 교류 활성화

(1)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수희)·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2월8일(목) 최근 충청권 지역간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 및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충청권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음

(2)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 최근의 제도 및 정책에 있어 지역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 지난해 12월 충청권 3개 시도광역단체장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공동발전 5개안에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금년 1월 15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대전과 충남의 만남”이 개최되는 등 충청권 지역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처럼 충청권 각 시도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지역간 이해득실을 떠나서 공동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절감하며

○ 이에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은 충청권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음

(3) 협약체결의 내용

○ 충청권의 지역경제, 교통・물류,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게 됨

가. 충청권 공동발전연구단의 구축

나. 공동 정책개발, 연구수행 및 세미나 개최

다. 연구인력의 상호지원

라. 각종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상호 제공

마.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바.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

(4) 충청권발전 공동연구단의 역할

○ 경제협력팀, 교통・물류팀, 관광팀, 환경팀의 4개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및 지원체계 구축, 통합교통망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관광사업 협력, 환경협력, 통합경제권의 추진조직 및 제도개발 등 충청권 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리 개발, 대수도론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 충청권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집중 연구하게 됨

(5) 협약체결의 의미

○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원간 협력 뿐 아니라 지역전체의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충청권 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됨과 동시에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권역이 나누어져 협력이 필요한 광역권 교통, 경제, 환경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여 충청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수도권에 대응한 공동체 형성

○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의 중부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야한다. 충청권은 지정학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허리부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4) 충청권 공동 투자에 의한 시범지구 지정

○ 충청권 경제통합의 효과와 비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려면 지역발전이 외생적 요소와 내생적 요소를 결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지역의 개발욕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실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과 지역협력사업 및 방안 마련 등 구체적 실천전략과 제도적 수단 확보가 요구된다.

○ 지역협력 및 제휴방안과 실천수단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3개 시도가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수단을 제시하며,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모형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충청권을 국가발전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간 기능보완 및 협력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체계구축,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5)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 및 중앙정부의 지원

○ 수도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수도론의 철회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인근 광역자치단체(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통합

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경제협의체' 구성이나 광역행정협의체를 만들어 미래여건과 지역성에 맞는 잠재력을 일궈낼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6) 행정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각종 행정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방안

○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국가중심, 중추기능을 담당할 대전과 충남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이 '하나'라는 인식아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을 비롯해 영·호남권, 강원권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충청권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해외관광 세일즈 전개, 충청권 관광활성화 방안, 해외시장, 국제교류 공동추진, 해외사무소 공동활용, 대전·충남간 교류 및 출·퇴근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V. 맺음말

○ 협력사례의 성공조건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에서 모두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의 문제, 제도적 장치나 협력기구의 문제, 행위자들의 의지, 능력, 가치관의 문제, 자원수준과 문화, 그리고 이

기주의 극복문제 등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통한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협력을 위한 높은 의지와 태도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기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대전시는 최근 대전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런데 대덕특구가 성공하려면 충남·북과 협력해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이 교류되어야 하며 특구개발의 파급효과가 대전은 물론 충남·북에 까지 극대화되도록 준비단계부터 같이 검토해야 한다. 또 충남이 백제권·내포문화권 개발을 비롯한 4대전략산업 육성계획들도 대전시와 같이 협조해 나갈 때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 특히 행정도시 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가는 대전·충남은 물론 경기, 전북과 함께 이 기회를 통해 꼭 닫혀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대학간, 기업간, NG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권역권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 따로 따로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및 지방화시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 끝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의 공통 현안 이슈와 상호 발전과제들을 정립해서 새로운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